

# 의회조사기구 국제협력 및 산업·문화·정치 분야 현안 조사를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장 이탈리아·오스트리아 방문

구 슬 이 (환경노동팀장)

하 혜 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김 수 정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

2026. 5. 18.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차 례

## I. 출장 개요 / 1

1. 방문 목적 ..... 1
2. 방문단 ..... 4
3. 방문 국가 및 방문 일정 ..... 4

## II. 이탈리아 의회 방문 / 6

1. 이탈리아 의회 방문 개요 ..... 6
2. 이탈리아의 핵심원자재 공급망 대응 및 해외 자원협력 현황 ..... 9
3. 이탈리아 하원 입법조사·연구국 면담 내용 ..... 12
4. 이탈리아 하원 EU 협력국 면담 내용 ..... 14
5. 이탈리아 의회 소개 ..... 19

## III. 교황청 방문 / 22

1. 교황청 방문 개요 ..... 22
2.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현황 ..... 25
3. 면담 내용 ..... 33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 37
5. 교황청 소개 ..... 41

#### IV.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 43

1. 대사관 방문 개요 ..... 43
2. 재외국민 국민투표제도 ..... 44
3. 면담 내용 ..... 46

#### V. 이탈리아 기업·산업·생산부(MIMIT) 방문 / 48

1. 이탈리아 기업·산업·생산부(MIMIT) 방문 개요 ..... 48
2. 이탈리아 정부의 핵심원자재 공급망 정책과 MIMIT의 이행체계 ..... 51
3. 면담 내용 ..... 54
4. 입법·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검토과제 ..... 58
5. 이탈리아 기업·산업·생산부(MIMIT) 소개 ..... 61

#### VI. 오스트리아 의회 법률·입법·조사서비스(LLR) 방문 / 63

1. 오스트리아 의회 법률·입법·조사서비스(LLR) 방문 개요 ..... 63
2.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및 의회조사기구 협의체 구성 현황 ..... 65
3. 면담 내용 ..... 70
4. 오스트리아 의회 법률·입법·조사서비스(LLR) 소개 ..... 72

#### VII. 오스트리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면담 / 76

1. 오스트리아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면담 개요 ..... 76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협의회 현황 ..... 77
3. 면담 내용 ..... 78

VIII. 오스트리아 KOTRA 빈 무역관 방문 및 기업간담회 / 82

- 1. 오스트리아 KOTRA 빈 무역관 방문 및 기업간담회 개요 ..... 82
- 2. 오스트리아 경제 동향 ..... 84
- 3. 간담회 주요 내용 ..... 89
- 4. 오스트리아 KOTRA 빈 무역관 소개 ..... 97

IX.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 98

- 1. 대사관 방문 개요 ..... 98
- 2.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 ..... 99
- 3. 면담 내용 ..... 101

## I. 출장 개요

### 1. 방문 목적

- 국외 출장의 목적은 첫째,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 기반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대중국 의존도 완화 전략의 이행 현황 조사
- EU는 CRMA를 통해 특정국에 대한 핵심원자재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역내 공급망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2030년까지 채굴 10%, 정·제련·가공 40%, 재활용 25%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허가 간소화, 환경규제 조정, 투자 및 금융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전략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s)’를 선정하여, 인허가 패스트트랙, 투자유치, 금융지원, 밸류체인 연계 등을 통해 핵심원자재 공급망의 병목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음
- 이번 조사를 통해, EU의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전략과 전략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프로젝트 유형별(채굴·정·제련·재활용) 이행 현황 및 애로요인, 회원국·기업·지역사회 간 거버넌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및 입법과제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개최 관련 교황청의 준비 현황 및 한국과의 협조 방안 모색

- 세계청년대회는 1985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젊은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목적으로 ‘세계 젊은이의 날’을 선포하며 시작되었고, 2023년 열여섯 번째 대회까지 세계 청년의 순례·친교를 위한 국제대회로 성장함
  - 2027년에는 서울에서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세계청년대회 역사상 최초의 분단국가 개최이자, 교황 레오 14세의 첫 방한이 이루어지는 행사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국제적 의미가 큼. 특히 30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임
  - 현재 국회에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3건이 계류중으로, 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교황청 방문을 통해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의 교황청-개최국 간 협력체계와 지원방식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의회조사기구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문
-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2025년 10월에는 제14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The 14th International Seminar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를 열고, 각국 대표단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함
  - 2025년에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총 17개 국가에서 31명의 의회 관계자가 참여함
  - 2026년도 조사처에서는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주제와 형식에 대한 각 국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번 방문

을 통해 오스트리아의회 사무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특히 올해부터 입법조사처에서는 국제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의회조사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추진 중임. 이에 오스트리아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올해의 국제세미나 계획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자 함
- 넷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 지역협의회 활동 현황을 파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 해외 45개 지역(137개국)에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평화통일정책 관련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우호적 국제 환경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중요 역할 있음
  - 이에 해외 지역협의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활동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다섯째,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국대사관을 방문
- 최근 OECD 주요국들은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참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정치환경 변화 속에서 재외선거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 필요
  - 또한, 2026년 3월 6일 「국민투표법」이 개정됐는데, 개정의 골자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재외국민 투표권 실시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대사관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

## 2. 방문단

- 방문단은 4인으로 국회입법조사처장, 환경노동팀장,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과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로 구성함

성명	직책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구슬이	환경노동팀 팀장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김수정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

## 3. 방문 국가 및 방문 일정

- 방문 국가
  -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오스트리아 비엔나
  
- 방문 기간
  - 2026. 4. 21. ~ 2026. 4. 28. (6박 8일)

## □ 출장일정

일 시	일 정	비 고
2026년 4월 21일(화)	○ 인천공항(13:20) →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19:35)	
4월 22일(수)	○ 이탈리아 의회 하원 방문 및 면담(10:00~13:00) - 입법조사·연구국, EU 협력국 면담 ○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 면담(13:30~15:00) ○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면담(15:30~17:00) ○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면담(18:30~20:30)	
4월 23일(목)	○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 면담(9:00~10:00) ○ 바티칸시국 시찰 (14:00~16:00) ○ 이탈리아 기업·산업·생산부(MIMIT) 방문 및 면담 (17:00~18:30)	
4월 24일(금)	○ 이탈리아 로마(08:55) → 오스트리아 빈(10:30) ○ 오스트리아 의회 사무국(LLR) 방문 및 면담 (15:00~16:30) ○ 오스트리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협 의회 면담(17:00~18:00)	비행기 이동
4월 27일(월)	○ 오스트리아 빈, KOTRA 빈 무역관 방문 및 기업 간담회(10:00~12:00) ○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 면담(12:30~14:30) ○ 빈 국제공항(4월 27일 18:30) → 인천공항(4월 28 일 12:30)	
4월 28일(화)	○ 인천공항(12:30)	

## II. 이탈리아 의회 방문 개요

### 1. 이탈리아 의회 방문 개요

#### □ 방문 목적

- 첫째, 이탈리아 하원 입법조사·연구국(Servizio Studi)의 의회 조사·분석 및 입법지원 기능을 파악하고,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복합 정책 사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파악하고자 함
  - 핵심원자재 공급망 이슈는 특정 산업부처의 정책에 한정되지 않고, 전략산업 원자재 확보, 자원순환, 해외 공급망 다변화, 비축제도, 환경규제, 통상정책, 경제안보 등이 결합된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이탈리아 하원 조사국이 국내외 법제 및 정책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의회 기관과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 정부 이행체계, 산업계 영향, 예산·금융지원 근거 등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파악하고자 함
- 둘째, 이탈리아 하원 EU 협력국(Servizio per i Rapporti con l'Unione europea)의 기능을 파악하고, EU 차원의 입법·정책 변화가 이탈리아 하원의 의정활동과 국내 입법·정책 논의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하고자 함
  - 특히 EU CRMA는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가공·재활용 역량 강화, 특정 제3국 의존도 완화, 전략 프로젝트 지정, 제3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회원국의 산업정책과 공급망 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U 차원의 주요 경제안보 입법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EU 공통정책과 이탈리아 국내 정책 간 연계 구조, 회원국 의회 차원의 정책검토 기능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방문일자 및 장소

- 일자: 2026년 4월 22일(화) 10:00 ~ 13:00
- 장소: 이탈리아의회 하원 회의실(Piazza Montecitorio, 1)

□ 참석자

국회입법조사처	이탈리아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관후 입법조사처장</li> <li>- 구슬이 환경노동팀 팀장</li> <li>-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li> <li>- 김수정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li> </ul>	<p>&lt;입법조사·연구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r. Bernardo Polverari 입법조사·연구국장</li> <li>- Mr. Stefano Bargiacchi 과장</li> <li>- Mr. Nicola Cezzi 과장</li> </ul>
	<p>&lt; EU 협력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r. Antonio Esposito EU 협력 국장</li> <li>- Mr. Massimo Santese 입법조사관</li> </ul>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손호석 서기관 등	

□ 면담사진

○ 이탈리아 의회 입법조사·연구국 및 EU 협력국 면담





## 2. 이탈리아의 핵심원자재 공급망 대응 및 해외 자원협력 현황

- 이탈리아는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자동차, 기계, 항공우주, 방산, 전자,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이 발달한 국가로서, 핵심광물 및 전략 원자재의 공급 차질이 산업생산과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sup>1)</sup>
- 이탈리아의 핵심원자재 관련 정책은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에 한정되기

1) European Commission, “Critical Raw Materials Act”,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eu-competitiveness/green-deal-industrial-plan/european-critical-raw-materials-act\\_en](https://commission.europa.eu/topics/eu-competitiveness/green-deal-industrial-plan/european-critical-raw-materials-act_en)> (검색일: 2026.5.4.).

보다,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보강, 전략산업 공급망 재편,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핵심원자재 접근성 제고, 재활용 및 저장 기능 강화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주요국의 공급망 내재화,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 에너지전환에 따른 광물수요 증가 등 대외환경 변화는 이탈리아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산업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이 결합된 의제로 검토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마테이 계획(Piano Mattei)’을 통해 대외 공급망 다변화와 자원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 2024년 시행된 마테이 계획 관련 법령은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탈리아-아프리카 전략계획’으로서,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적·전략적 문서로 규정되어 있음

- 동 계획은 개발협력, 수출 및 투자 촉진, 교육·훈련, 연구·혁신, 보건, 농업·식량안보,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공급 및 활용, 환경보호, 인프라, 에너지 파트너십, 순환경제·재활용, 기업가정신 지원, 고용 촉진, 이주관리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있음<sup>2)</sup>

○ 마테이 계획은 핵심원자재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 정책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개발협력, 투자, 인프라, 에너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공급·활용 등을 포괄하는 대외협력 전략으로서 향후 자원협력 및

2) Decreto-legge 15 novembre 2023, n. 161, “Disposizioni urgenti per il «Piano Mattei» per lo sviluppo in Stati del Continente africano”, art. 1, commi 1-2, convertito con modificazioni dalla Legge 11 gennaio 2024, n. 2, Gazzetta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 Serie Generale n. 10, 2024.1.13.

공급망 안정화 논의와 연계될 수 있음

- 이탈리아는 전략산업 공급망과 핵심원자재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재원을 활용한 투자기반도 마련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Made in Italy」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Made in Italy 국가기금(Fondo nazionale del Made in Italy)’을 설치하였으며, 동 기금은 2023년 7억 유로, 2024년 3억 유로 등 총 10억 유로의 초기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음
  - 동 기금은 공공부문 외 주체의 재원 참여를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략적 지원 분야에는 핵심원자재의 추출, 가공·전환, 조달, 재활용, 재사용, 유통 등이 포함되어 있음<sup>3)</sup>
  - 이는 이탈리아에서 핵심원자재 확보 문제가 광산 개발이나 수입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 공급망 전반의 투자·금융지원 및 순환경제 정책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탈리아의 해외 광물 정책은 EU 차원의 핵심원자재 공급망 재편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이탈리아와 독일은 2026년 2월 핵심원자재 관련 전략문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전략적 의존 완화와 유럽 기업을 위한 안전한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음<sup>4)</sup>

3) 참고로 국영 투자기관인 Cassa Depositi e Prestiti(CDP)는 MIMIT와 함께 InvestEU 프로그램의 틀에서 에너지·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원자재 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분석을 위한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4)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e del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Minerali critici, documento strategico di Italia e Germania alla Commissione UE,” 3 February 2026.

- 이는 이탈리아가 핵심광물 문제를 자국 산업정책뿐 아니라 EU 차원의 경제안보, 유사입장국 및 제3국과의 협력,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함
- 최근에는 핵심원자재 비축 및 저장 기능도 EU 공급망 안정화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EU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핵심원자재 비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EU 차원의 핵심원자재 비축 논의에서 각각 저장, 금융, 조달 기능과 관련된 역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탈리아는 지중해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만·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핵심원자재의 저장 및 물류 기능과 관련한 역할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3. 이탈리아 하원 입법조사·연구국 면담 내용

- 핵심원자재 공급망 문제는 산업·통상·환경정책, 경제안보 등이 결합된 복합 정책 사안으로, 의회 차원의 조사·분석 기능과도 연계되는 의제로 검토될 수 있음
- 면담에서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가 산업·통상·환경정책 및 경제안보와 연계되는 복합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아울러 전략산업 보호, 자원순환, 해외 공급망 다변화, 비축제도 등은 향후 입법·정책 검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할 수

있음

- 이탈리아 하원 입법조사·연구국(Servizio Studi)은 국내 법제와 정책자료 뿐 아니라 외국 및 EU 법제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의회 기관과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핵심원자재와 같은 복합 의제에 대해서는 비교 입법, 정책 효과, 정부 이행체계,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의회 내 조사·분석 기능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이탈리아의 핵심원자재 정책은 제조업 기반 보호, 공급망 재편, 자원순환, 전략산업 원자재 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회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 관련 법령의 정합성, 예산·금융지원의 근거, 산업계 영향, 부처 간 역할분담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이탈리아의 핵심원자재 정책은 제조업 보호와 산업공급망 안정화의 관점에서 의회 차원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탈리아는 제조업 생산가치와 상품수출 규모 측면에서 EU 내 주요 제조업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며, 핵심원자재 공급 차질은 자동차, 기계,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기·전자,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생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이탈리아의 핵심원자재 정책은 단순한 자원 확보정책이라기보다, 제조업 기반 유지, 전략산업 생산역량 확보, 공급망 충격 완화, 재활용·순환자원 활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정책적 의제로 검토될 수 있음
  - 의회 조사기관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 법제, 예산, 산업지원 수단, 정부 조직체계, 민간기업의 참여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 될 수 있음

#### 4. 이탈리아 하원 EU 협력국 면담 내용

- 이번 면담에서는 EU 입법·정책이 이탈리아 하원의 의정활동과 국내 정책 논의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이탈리아 하원 EU 협력국(Servizio per i Rapporti con l'Unione europea)은 EU 기관과의 관계, EU 정책위원회 관련 사무, EU 기관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정보제공·기술문서 지원, EU 및 국내 법령에 따라 하원에 제출되는 EU 관련 문서의 접수·배포 및 검토 지원, 유럽의회 및 EU 회원국 의회와의 협력, EU 기관 소개 하원 상설조직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EU 관계국은 EU 기관과의 교류 지원뿐 아니라, EU 차원의 입법·정책 변화가 하원의 심사·감독·정책검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회 내부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EU CRMA와 같이 회원국의 산업정책, 공급망 관리, 자원순환, 대외경제안보와 연계되는 EU 입법은 각 회원국 의회에서도 EU 정책의 형성 및 이행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례로 논의되었음
- EU 핵심원자재 정책은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EU 차원의 경제안보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EU는 기후·디지털 전환, 방위산업, 항공우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필요한 핵심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역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특정 제3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EU는 CRMA를 통해 핵심원자재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EU 연간 수요 기준으로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역량을 확보하고, 특정 제3국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EU의 단일 국가 의존도 65% 이상 전략 원자재]

순위	품목	주요 공급국 (수입 비중)	순위	품목	주요 공급국 (수입 비중)
1	마그네슘	중국(97%)	5	네오디뮴 (Nd, 희토류)	중국(75%)
2	리튬	칠레(79%)	6	사마륨 (Sm, 희토류)	중국(74%)
3	테르븀 (Tb, 희토류)	중국(77%)	7	프라세디뮴 (Pr, 희토류)	중국(74%)
4	가돌리늄 (Gd, 희토류)	중국(76%)	8	갈륨	중국(71%)

\* 자료: European Court of Auditors('26.2), '25.1월 DG Grow 데이터 기준

- 면담에서는 CRMA가 EU 공통정책이면서도 회원국별 산업구조에 따라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 논의되었음
- 이처럼 CRMA는 EU 차원의 공통 규범이지만, 회원국별로 정책의 초점과 활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EU 관계국과 같은 의회 내부 조직은 EU 공통정책과 국내 정책 간 연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EU 핵심원자재 정책과 주요국 정책 방향 비교]

구분	EU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정책 수준	초국가	국가 산업 정책	국가 전략	국가+EU연계	국가 산업 정책
핵심 목표	전략적 자율성, 공급망 리스크 감소	제조업 보호	재산업화	원자재 가공·재활용 허브	제조업 보호 및 자원 효율성 제고
주요 정책	CRMA	Reshoring	France 2030	Circular Economy Strategy	Austrian Raw Materials Strategy
공급망 전략	글로벌 다변화	유럽 및 인근 지역 위주 공급망 재편	국내·외 전략광물 확보	재활용 중심 공급망, 물류 허브 활용	제조업 중심 원자재 확보, 재활용 확대
중점 산업군	반도체·배터리	제조업	항공·방산	배터리·화학·금속 재활용	철강·자동차 부품·기계 산업

\*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제출자료(2026.3.); European Commission, “Critical Raw Materials Act”,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raw-materials/areas-specific-interest/critical-raw-materials/critical-raw-materials-act\\_en](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raw-materials/areas-specific-interest/critical-raw-materials/critical-raw-materials-act_en)> (검색일: 2026.5.4.)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 EU의 ‘전략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s)’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EU 차원의 실행수단으로 논의되었음
- EU 집행위원회는 CRMA 이행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최초의 47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

아, 독일, 스페인, 에스토니아, 체코,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등 13개 회원국에 분포하고 있음<sup>5)</sup>

- 면담에서는 이러한 전략 프로젝트가 ① EU 차원의 정책목표를 실제 산업현장과 연결하는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② 회원국 의회가 프로젝트 선정 이후의 인허가, 재정지원, 지역사회 수용성, 환경규제, 산업계 참여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음

- 특히 전략 프로젝트는 EU 공통목표와 회원국 국내 행정절차가 결합되는 영역이므로, 회원국 의회는 정부의 이행계획,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 기업 지원체계, EU 재정·금융 수단 활용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EU 핵심원자재 정책은 역내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도 연결되어 있음

- EU는 CRMA를 통해 역내 채굴·가공·재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3국과의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핵심원자재 확보가 EU 내부의 산업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통상 관계, 투자·금융지원, 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면담에서는 최근 미·중 전략경쟁,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 주요국의 공급망 내재화, 에너지전환에 따른 광물수요 증가 등이 EU의 핵심원자재 정책을 강화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음

5) 전략 프로젝트는 역내 채굴, 가공, 재활용 역량을 확대하여 EU의 원자재 가치 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EU의 핵심원자재 정책은 특정 광종의 수급 문제를 넘어,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역내 산업기반 유지, 대외 의존도 완화, 협력국 및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확대를 포괄하는 경제안보 정책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EU 관계국과의 면담은 우리나라 국회 차원에서도 EU 경제안보 입법과 글로벌 공급망 규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한국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의 CRMA,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 순환경제 정책, 공급망 실사 관련 법제는 한국 기업의 수출, 투자, 조달, 재활용, 공급망 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한국의 주요 전략산업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EU의 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정책 및 입법과제와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면담을 통해 EU 입법·정책의 형성 및 이행 과정을 회원국 의회가 어떻게 검토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국회 역시 주요국 경제안보 법제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제도개선 과제와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면담에서는 CRMA가 EU 공통정책이면서도 회원국별 산업구조에 따라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 논의되었음
  - EU는 CRMA를 통해 공통의 공급망 안정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은 회원국별 산업구조, 자원부존 여건, 제조업 기반, 물류 인프라, 재활용 역량, 인허가 체계 등에 따라 상이한 정책수단과 결합될 수 있음

- 이처럼 CRMA는 EU 차원의 공통 규범이지만, 회원국별로 정책의 초점과 활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EU 관계국과 같은 의회 내부 조직은 EU 공통정책과 국내 정책 간 연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5. 이탈리아 의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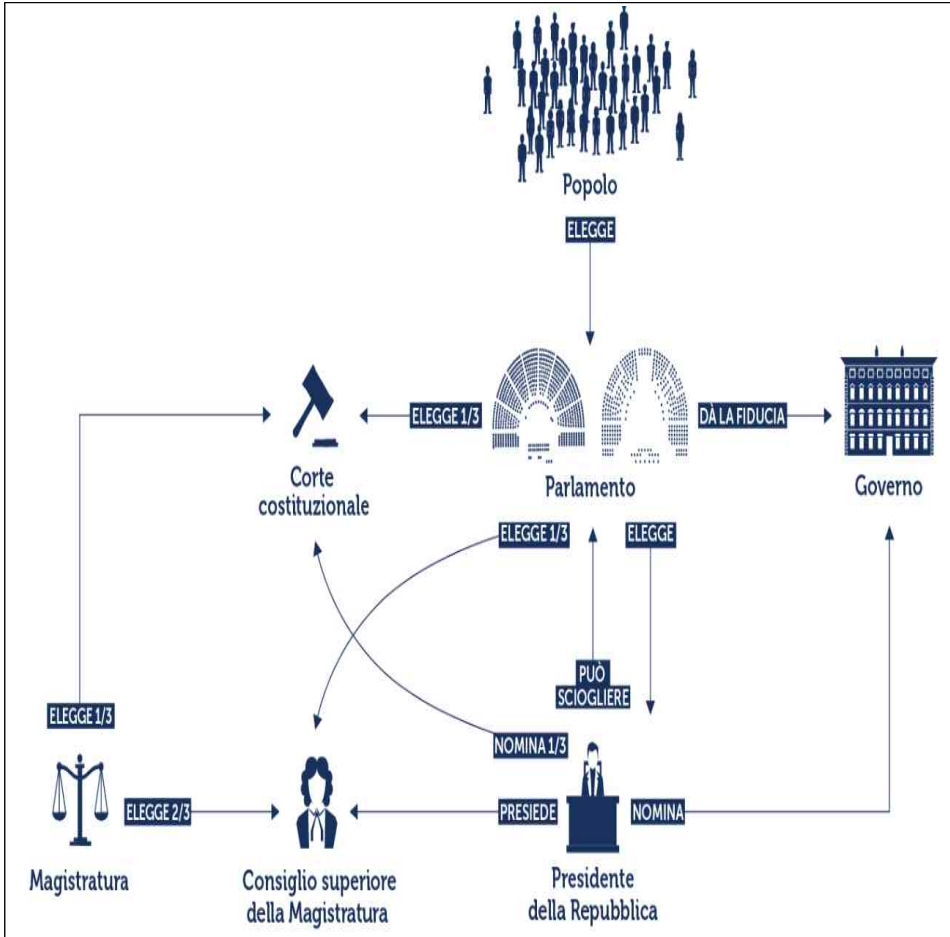
### 가. 의회 현황

- 이탈리아 의회는 하원(Camera dei deputati)과 상원(Senato della Repubblica)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임
- 이탈리아 의회는 하원과 상원이 동등한 기능과 권한을 갖는 이른바 ‘완전양원제(Perfect Bicameralism)’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양원은 법률 제정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신임투표를 통해 정부의 정치적 방향 설정에 관여하며, 질의·조사 등을 통해 정부 활동을 통제함<sup>6)</sup>
- 하원과 상원은 모두 임기 5년으로 구성되며, 2020년 헌법개정에 따른 의원정수 감축 이후 하원은 400명, 상원은 선출직 2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하원 400명 중 8명은 재외선거구에서 선출되며, 상원 선출직 200명 중 4명은 재외선거구에서 선출됨

6) 또한 양원 합동회의는 각 주 의회가 선출한 지역대표와 함께 대통령 선출 등 헌법상 특정 기능을 수행함

- 2022년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혼합형 제도로, 2022년 총선 기준 하원은 국내 선거구 392석 중 147석이 소선거구, 245석이 비례대표 방식으로 배분되며, 별도로 재외선거구 8석이 배정됨
  - 상원은 국내 선거구 196석 중 74석이 소선거구, 122석이 비례대표 방식으로 배분되며, 별도로 재외선거구 4석이 배정됨
- 상원은 2026년 5월 현재 Ignazio La Russa 상원의장을 중심으로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음
  - 상원의장은 Ignazio La Russa이며, 부의장은 Gian Marco Centinaio, Anna Rossomando, Maria Domenica Castellone, Licia Ronzulli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원은 선출직 200명과 종신상원의원으로 구성되며, 하원과 함께 입법 및 정부 통제 기능을 수행함
- 하원은 2026년 5월 현재 Lorenzo Fontana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음
  - 하원의장은 Lorenzo Fontana이며, 부의장은 Fabio Rampelli, Giorgio Mulè, Anna Ascani, Sergio Costa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원은 4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법률안 심사·의결, 정부에 대한 통제, 질의·조사, 위원회 활동, EU 정책 검토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함

□ 이탈리아 의회의 지위와 역할



\*자료: Camera dei deputati, “La Camera nel sistema parlamentare”, Conoscere la Camera, ><https://conoscere.camera.it/la-camera-dei-deputati/la-camera-nel-sistema-parlamentare>> (검색일: 2026.5.8.).

### Ⅲ. 교황청 방문

#### 1. 교황청 방문 개요

##### 가. 방문 목적 및 방문 일자

###### □ 방문 목적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 WYD)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과 교황청 간의 협력 방안 모색

###### □ 면담 개요

- 제1차 면담: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신형식 대사 면담
  - 일자 : 2026년 4월 22일(수) 13:30 ~ 15:00
  - 장소: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사무실
- 제2차 면담: 교황청 유흥식 장관(성직자부) 및 추기경 면담
  - 일자 : 2026년 4월 22일(수) 15:30 ~ 17:00
  - 장소: 교황청 성직자부 사무실
- 제3차 면담: 교황청 Kevin Joseph Farrell 장관(평신도가정생명부) 및 추기경 면담
  - 일자 : 2026년 4월 23일(목) 9:00~10:00
  - 장소 :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사무실

나. 참석자

□ 주요 면담자

-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신형식 대사 면담
- 교황청 유흥식 성직자부 장관(추기경) 면담
- 교황청 Kevin Joseph Farrell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추기경) 면담

□ 참석자

국회입법조사처	교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관후 입법조사처장</li> <li>- 구슬이 환경노동팀 팀장</li> <li>-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li> <li>- 김수정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vin Joseph Farrell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추기경)</li> <li>- 유흥식 성직자부 장관(추기경)</li> <li>- 박수현 교황청 성직자부 사무관</li> </ul>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형식 대사</li> <li>- 이수원 참사관</li> <li>- 윤세리 서기관</li> </ul>	

□ 면담사진

○ 신형식 대사 면담 사진



○ 유흥식 장관(추기경) 면담 사진



○ Kevin Joseph Farrell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추기경)



## 2.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현황

### 가. 세계청년대회 개요

#### □ 세계청년대회 개최 배경

- 세계청년대회는 1985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젊은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목적으로 ‘세계 젊은이의 날’을 선포하며 시작되었고, 2023년 열여섯 번째 대회까지 세계 청년의 순례·친교를 위한 국제대회로 성장함)

7)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안내서』, 2026.

- 1986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세계 청년대회가 개최된 이래, 해마다 각 지역의 교구에서 대회를 주최하였으며, 세계 젊은이와 순례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로서 3~4년에 한 번씩 개최됨

□ 세계청년대회의 개최 연혁

- 세계청년대회는 평균 180개국에서 참여하며, 참석자 규모가 매머드급임. 1995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에는 약 4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2008년 호주 시드니 대회에는 가장 적은 인원이 참석하였는데, 약 40만 명에 달함
  - 가장 최근 대회인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는 약 150만 명이 참석하였음

[세계청년대회 개최 현황과 참석자 수]

연도	개최일자	국가	장소	참석자 수
1985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로마	300,000명
1987년	4월 11~1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000,000명
1989년	8월 15~20일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400,000명
1991년	8월 10~15일	폴란드	체스토호바	1,600,000명
1993년	8월 10~15일	미국	덴버	500,000명
1995년	1월 10~15일	필리핀	마닐라	4,000,000명
1997년	8월 19~24일	프랑스	파리	1,200,000명
2000년	8월 15~20일	이탈리아	로마	2,000,000명
2002년	7월 23~28일	캐나다	토론토	800,000명
2005년	8월 16~21일	독일	퀵른	1,100,000명

2008년	7월 15~20일	호주	시드니	400,000명
2011년	8월 16~21일	스페인	마드리드	2,000,000명
2013년	7월 23~2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3,000,000명
2016년	7월 26~31일	폴란드	크라쿠프	3,000,000명
2019년	1월 22~27일	파나마	파나마시티	700,000명
2023년	8월 1~6일	포르투갈	리스본	1,500,000명

\* 자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 나.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2027 Seoul World Youth Day)

####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개요

- (행사명)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영문: WYD SEOUL 2027
- (행사규모) 40만 명 ~ 100만 명(예상)
- (행사기간) 2027. 7. 29. ~ 2027. 8. 8.
  - 교구대회(4박 5일) : 각 지역교구에서 준비한 교육프로그램
  - 본대회(5박 6일) : 교황 환영행사, 개막미사, 교리교육, 십자가의 길, 젊은이 축제(YF), 밤샘기도, 폐막미사 등
- (주최/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재)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주제 성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주제 성구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선택함
  -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으로, 수난과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마침내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깊은 진리를 상기시켜 줌

- 오늘날 다양한 갈등, 취업의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전 세계 청년들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기쁨을 체험하고, 서로 만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깨달은 복음의 기쁨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담대히 실천하는 ‘희망의 순례자’, ‘용기로 가득한 선교사’로 세상에 파견될 것임8)

○ 대회 프로그램(안)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프로그램(안)]

	7/29	30	31	8/1	2	3	4	5	6	7	8
오전	교구대회 개별 교구에서 자체 행사 기획/진행				이 동 서 울 로 이 동	본 대 회	글로벌 청년 영성 아카데미			YF	폐 막 식
오후							젊은이 축제(YF)				봉 사 자 만 남
저녁						개 막 식	YF	환 영 행 사	청 년 평 화 의 길	밤 샘 네 트 워 킹	

\* 자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8) 2027 서울 WYD 홈페이지(<https://wydseoul.org/introduction/theme>)

□ 한국 천주교 준비상황

-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동 대회 준비를 위해 2023년 12월에 조직위원회를 출범하였고, 다음 해인 2024년 7월에 대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8월 7일에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서울시 등록)

[(재)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현황]

- (목적)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통해 젊은이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역할을 갖고,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대하는 기회 제공
- (임원) 이사장 이경상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이사 12인, 감사 2인
- (재산) 47억원 \*(기본재산 30억원, 보통재산 17억원)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출연금, 서울시 등록일 기준
- (사업내용) 2027 세계청년대회 사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

\* 자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기준: '24.8월 설립당시)

□ 정부의 준비 상황

- 정부는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2025년에 7억 원을 편성해 집행했고, 2026년도 예산안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음)

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7 제41차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25.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2026년도 예산안 : 3,000백만원(국비)
  - 통합 홍보(1,000백만원)
    -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300백만원)
    - 홈페이지 고도화(기능 및 콘텐츠 강화)(200백만원)
    - 서울 WYD 홍보관 운영(400백만원)
    - 도슨트 투어 앱 개발(100백만원)
  -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운영(2,000백만원)
    - 2027 서울 WYD 참가국 박람회(650백만원)
    - 청년 예술인과 함께하는 Art in K-Catholic(1,250백만원)
    - WYD 청년 컨퍼런스(100백만원)

\* 자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7 제41차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25.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의 국가적 의의
  - 세계청년대회의 한국 개최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 세계 청년들과 공유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이점이 있음<sup>10)</sup>
- 국회 지원 및 관련 입법 동향
  - 2026. 3. 17. 국회 추진단을 발족해서, 국회가톨릭신도의회 소속 의원님 57분을 국회 추진단에 위촉. 공동 추진단장으로 조정식, 나경원 의원, 집행위원장으로는 한정애 의원이 선임
  - 지난 3.31.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국제문화행사

10) 천주교 서울대교구·국회 가톨릭신도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국회 추진단 발족식 및 설명회」, 2026.3.17.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통과되어, 행사 지원에 도움이 될 것임

- 제22대 국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임
  - 김상훈·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6), 2024.11.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5), 2024.11.19.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 최형두의원·박수현의원·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8), 2025.8.8.,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최형두의원·박수현의원·이해민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 가. 이 법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 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함(안 제5조제1항).
- 라.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 바. 조직위원회는 기념주화의 발행은 한국은행에게, 기념우표 또는 기념우편엽서의 발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안 제15조).
- 아.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6조).
- 자.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
- 차.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9조).

<참고: 세계청년대회 지원법 관련 해외사례>

- 2013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WYD
  - 2013년 제27회 세계청년대회 조직 및 개최와 관련된 세제 혜택 및 혜택 제정(제5566호 법령 2013년 12월 4일 / 리우데자네이루시 의회)
  - 리우 WYD 특별위원회 설립법 (2011년 10월 5일 43,219호)
- 2016 폴란드 크라쿠프 WYD
  - 폴란드 공화국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문 및 2016 크라쿠프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18일 제정 법률)
- 2023 포르투갈 리스본 WYD법
  - 프로젝트 그룹을 설립하여 2023년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대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명시하며, 보바델라 로도 철도 복합 물류 복합체의 영구 재배치 일정을 결정함 (2021년 4월 28일 총리 내각령 45/2021)

### 3. 면담 내용

#### 가.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신형식 대사 면담

- 2027년 서울에서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Seoul 2027)’가 개최됨. 이에 따라 한국과 교황청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들 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역시 주요한 역할이 요구됨
-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법률(「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해당 법률안이 통과하여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함
- 올해 3월에는 국회가톨릭신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서울 세계청년대회 국회 추진단이 발족되었음. 이들 국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함
- 무엇보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의 화합의 문화행사라고 생각함. 종교의 틀을 넘어 청년들에게 지원이 필요함
- 특히, 내년 행사에 교황이 직접 우리나라에 방문할 예정임. 교황은 방한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서 이는 국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음. 한국에서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위해서 관련 지원 법률이 통과되기를 희망함

## 나. 교황청 유홍식 장관(추기경) 면담 내용

-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매우 뜻깊은 행사임.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울을 차기 대회 개최지로 발표했는데, 이는 비 가톨릭 국가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가톨릭 신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톨릭 행사인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히 종교행사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음
- 비록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이 주축이 되는 행사이지만, 청년들이 종교의 틀을 넘어, 희망을 주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임
  - 특정 종교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상호 교류하고, 지식과 지혜, 희망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함
  - 이 행사는 3년에 한 번 개최되는데, 교황이 행사의 주제를 해당 국가의 특징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음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주제 성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첫째, 행사 관련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청년들의 비자 이슈가 있음.  
전 세계 청년들이 서울에 오려면 이들의 비자 문제가 있으며, 비자 발급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무부 관련

부처의 도움이 필요함.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청년들 비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교님이 인증을 하든지, 비자 발급 절차의 원활한 행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둘째, 서울에 전 세계 청년들이 일시에 모일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세계청년대회에 모이는 청년들은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내년 행사가 8월에 치러지는 만큼 더위 문제, 안전 문제 등에 유의해야 함
- 셋째, 서울 지역에 모이는 청년들의 숙박 문제를 해결해야 함. 그동안 청년들이 홈스테이 위주의 숙박을 했는데, 가톨릭 신자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자들의 홈스테이만으로 숙박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다양한 방법의 숙박 문제 해결방안이 요구됨
- 넷째,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의 마련이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가 있음. 서울 지역에만 한정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보다는 비수도권에서도 다양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교구 및 지역에서 성지를 중심으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행사를 마치고도 계속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다. 교황청 Kevin Joseph Farrell 장관(추기경) 면담 내용

-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람. 이는 모든 국가의 문화를 아우르는 행사임. 세계청년대회에는 매우 많은 청년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데, 가장 최근 2023년 리스본 행사에는 약

### 150만 명이 참여함

-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일종의 축제 같은 형태로 한자리에 모임. 처음에는 성당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인식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에 대해, 화합에 대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세계의 평화를 위한 주제는 단순히 가톨릭 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님. 매일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집을 잃고 갈 곳도 없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희망을 다뤄야 함
- 또한 세계청년대회는 정치적 의도가 가담되지 않음.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교황께서는 모든 종교 간의 사랑과 배려, 이해, 우정, 그리고 열린 마음을 담고 있음
- 세계청년대회의 규모가 커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누가 올지 예측하기 어려움. 따라서 행사 개최시 보안 문제가 제기됨
- 행사에서 미사가 열린 장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어서 안전 문제 역시 대비가 필요함
- 세계청년대회 이슈에는 청년들이 서울로 오는 비용 문제가 있음. 최근 비행기 가격이 높아져서 참여의 어려움이 있음. 또한, 청년들의 비자 문제가 있음. 특별 예외 비자의 발급 등 절차의 간소화 논의도 필요함

####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교황청에 방문하여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청년·평화 국제행사 프레임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 내년 행사에 적게는 4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청년들이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서,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는 특정 종교 행사가 아닌, 청년 교류·평화·문화의 국제축제로 인식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입법·예산 논의에서도 “종교행사 지원 vs 형평성 논쟁”을 넘어, 청년정책·공공외교·평화정책 차원의 국가프로젝트로 재규정하는 홍보전략·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서울 세계청년대회에는 교황 레오 14세가 방한할 예정이며, 방한시 한국에 주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임
- 둘째, 청년정책·공공외교와의 연계 강화 방안이 요구됨.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국제적인 평화 교류를 이슈화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앞으로 분단국·중견국 한국의 위상과 평화메시지를 세계 청년에게 알리는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교부·KOICA·문화원 등과 연계한 세션·전시·포럼 구성도 필요함

- 셋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입법적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올해 3월에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행사 지원의 기본 법률은 있으나, 행사의 특성에 맞춘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제22대 국회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3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 해외 사례(브라질·폴란드·포르투갈)의 경우, 세제혜택, 특별조치법, 프로젝트 그룹 설치 등으로 세계청년대회를 뒷받침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2023년에 전북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위해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2018.12.18.)한 바 있음
  
- 넷째, 한국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2023년 전북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폭염 대응 물자·시설 부족, 화장실 위생 불량, 부지 침수 등으로 참가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고, 일부 국가 참가자의 조기 철수로 이어지는 등 운영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바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해당 대회의 준비·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sup>11)</sup>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의 국제행사 개최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만큼,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체계적 준

11) 감사원, 『감사보고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실태』, 2025.

비와 안정적 운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범정부 지원체계와 중앙정부·지방정부·종교계 간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 더 나아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종교계를 포함한 국내외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발의안에는 문체부 소속의 ‘정부지원위원회’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무부·행안부·국토부·서울시·지방교구 등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들 간의 협력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자·출입국, 치안·재난안전, 도시교통·숙박, 의료·보건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와 서울대 교구·지방자치단체 간 상설 협의체를 법률·시행령·MOU 등 적절한 수준에서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내년에 한국을 방문할 전 세계청년들의 비자·출입국 절차에 대한 특별조치 검토가 필요함. 주요 면담자들은 세계청년들이 한국에 원활히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의 간소화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과거 올림픽·국제박람회 사례와 같이,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에 대한 단기 사증 수수료 감면, 단체사증, 전자사증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비자 간소화를 위해 주교 인증 등 교회 측 확인을 활용한 신원 심사 간소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이와 함께 출입국 혼잡 최소화를 위한 전용 심사대 설치 등을 출입국관리법·하위법령 또는 한시법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일곱째, 대규모 군중·폭염·재난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임. 내년 세계청년대회는 약 40만 ~ 100만 명 규모의 참가가 예상되고, 8월에 개최되는 일정상 대규모 인파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해 군중통제, 피난 동선 설계, 응급의료 및 병상 확보 등 다차원적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폭염정보 연계, 야간행사 안전기준, 경찰·소방·민간 자원봉사 인력 운영기준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행사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청년들의 숙박 및 도시수용능력에 대한 공·민간 복합 해법 마련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자 비율이 2024년 기준 11.4%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sup>12)</sup>, 기존 세계청년대회와 같이 홈스테이만으로는 대규모 숙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임시숙소(학교·공공시설·캠핑장) 활용, 인근 수도권·지방도시로의 분산 숙박, 단체예약 조정, 숙박요금 폭리 방지 등 공공정책과 플랫폼·

12) 한국천주교주교회, 『2024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5, p.11.

관광업계의 협력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홉째, 비수도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균형·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유흥식 추기경은 면담을 통해 수도권 - 비수도권 불균형을 지적하고, 성지 순례·지역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행사 이후에도 방문이 이어지는 구조를 제안함
- 예를 들어, 비수도권 교구·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세계청년대회 주간’, 성지·문화유산·DMZ 평화관광 코스 개발, 교통패스·관광패스 제도 설계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관광산업 활성화 정책과 연동하는 방안 등 다양한 문화행사 설계도 필요함

## 5. 교황청 소개

- 교황청(教皇廳, The Holy See)은 바티칸 시국(Vatican City State)에 위치한 가톨릭교회의 최고 통치 기관임
- 교황청은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0.44km<sup>2</sup> (성베드로 대성당, 성베드로 광장, 교황 거처 및 사무실 등 : 서울 창덕궁 정도의 면적)임. 그리고 인구는 1,000여 명(2025년 기준)임
- 현재 교황은 레오 14세(Leo XIV, 제267대 교황, 재위 2025.5.~ )이며,

2025.5.8. 선출되었고, 2025.5.18. 즉위함

- 교황 레오 14세는 2027년 8월 서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 참석차 방한 예정이며, 역대 교황으로는 전임 프란치스코 방한에 이어 13년 만의 네 번째 방한이 될 예정

## IV.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 1. 대사관 방문 개요

#### 가. 방문 목적 및 방문 일자

방문 목적

- 재외국민 투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사관을 방문하여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보완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방문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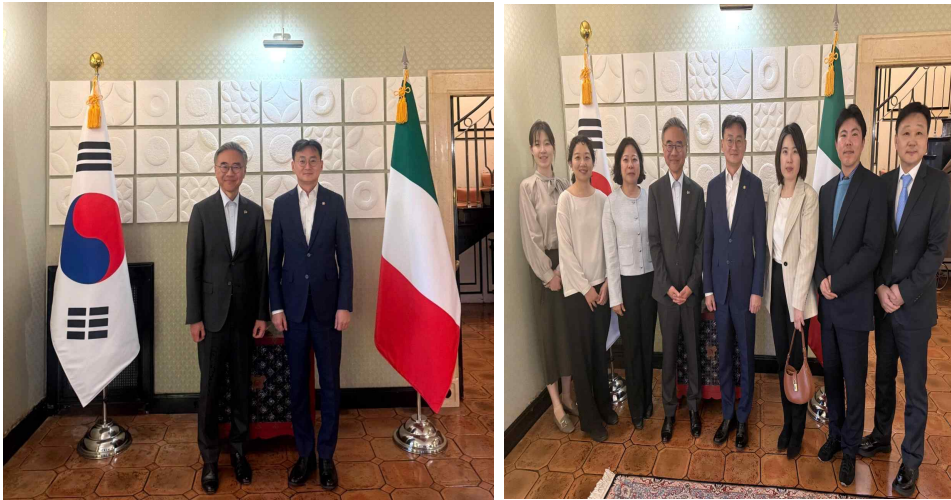
- 일자 : 2026년 4월 22일(수) 18:30 ~ 20:30
- 장소: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나. 참석자

국회입법조사처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관후 입법조사처장</li> <li>- 구슬이 환경노동팀 팀장</li> <li>-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li> <li>- 김수정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준구 대사</li> <li>- 손호석 서기관</li> <li>- 이광현 부영사 등</li> </ul>

□ 방문 사진

○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2. 재외국민 국민투표제도

- 지난 2026년 3월 6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규정을 마련함
  -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따라 2026년 3월, 37년 만에 전부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특히,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

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 및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 및 제4조제2항)


**[2026.3.6. 전부개정 「국민투표법」 주요 개정 내용]**

-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인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인명부 등재 근거 마련
- (투표 연령 하향) 국민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공직선거법과 투표 연령이 통일
- (투표 방식 다양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가 도입되어 투표 편의성이 증대
- (지방선거 동시 실시 특례)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또는 교육감 선거와 같은 날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

-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8099)이 우원식의원·한병도의원·서왕진의원·윤종오의원·천하람의원·용혜인의원·한창민의원 등 187인 대표발의로 2026년 4월 3일 발의됨
- 헌법개정안이 2026년 4월 7일 공고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를 준비함.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첫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음
  - 헌법개정안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95명 중 197명 이상) 찬성시 통과가 됨. 당시 국회 의결(5.4.~5.10.)에 따라 국민투표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만일, 헌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에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음
- 그런데, 2026년 5월 7일 헌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서, 이번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없게 됨

### 3. 면담 내용

- 이탈리아 거주 재외동포는 약 4,550명(2025.12월, 재외동포현황)이 거주하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라치오주(로마 등) 1,168명, 롬바르디아주(밀라노 등) 2,084명, 기타(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 등) 1,298명이 있음
- 주요 한인 단체로서 △로마 중심의 재이탈리아한인회(1968년 창립)와 △밀라노 중심의 이탈리아한인회(1980년 창립)가 활동 중임. 또한, 가이드협회, 음악인협회, 미술가협회 등 직능별 단체 활동 중에 있음
-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관련 안내를 재외국민에게 제시함

<p><b>【국외부재자신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기간 : 2026.4.8. ~ 2026.4.27.</li> <li>□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li> <li>○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li> </ul> </li> <li>□ 제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li> <li>○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li> </ul> </li> </ul>	<p>공고 제2026-02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b></p> <p>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위한 전자우편 주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6년 4월 7일</p> <p style="text-align: right;">주이탈리아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p> <p>1. 전자우편 주소 : ovitally@mofa.go.kr</p> <p>*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 신청에 한해 제출 가능 * 중앙선거위 홈페이지(www.nec.go.kr), 시민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으로도 신고·신청 가능)</p> <p>2. 접수기간 : 2026. 4. 8. ~ 2026. 4. 27.</p> <p>3.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신청 후 국내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부작성기간 만료일(2026. 5. 9.)까지 철회신청을 할 수 있음.</li> </ul>
---	---

- 2026년 3월 「국민투표법」이 전부개정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탈리아 대사관에서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국민투표 준비를 시작함. 2026년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을 진행하고 있음
-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대비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었음
- 이번이 처음 준비하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대사관의 입장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공보의 범위와 홍보 방식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의 공보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공보와 홍보가 차이가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소개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함

## V. 이탈리아 기업·산업·생산부(MIMIT) 방문

### 1. 기업·산업·생산부(MIMIT) 방문 개요

#### 가. 방문 목적 및 방문 일자

##### □ 방문 목적

- EU CRMA 시행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내 입법·정책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특히 MIMIT가 핵심원자재의 가공·전환,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 산업수요 모니터링, 관련 기업 및 공급망 구조 파악 등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및 입법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아울러 제조업 기반 EU 회원국인 이탈리아가 핵심원자재 확보, 국내 탐사, 순환자원 활용, 산업경쟁력 강화, 대외 공급망 다변화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또한 MIMIT 면담은 이탈리아의 핵심원자재 정책을 EU 차원의 규범 이행과 자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측면에서 파악하고, 한국의 배터리·반도체·방위산업·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음

##### □ 방문 일자

- 일자 : 2026년 4월 23일(목) 17:00 ~ 18:30
- 장소: 기업·산업·생산부(MIMIT) 회의실

나. 참석자

국회입법조사처	MI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관후 입법조사처장</li> <li>- 구슬이 환경노동팀 팀장</li> <li>-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li> <li>- 김수정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va Spina, Head of the Department for Digitalization, Connectivity and New Technologies</li> <li>- Francesca Tenuta, Director, Division V (Raw Materials, Electronics and Photonics)</li> <li>- Ida Simeone, Officer, Division V (Raw Materials, Electronics and Photonics)</li> <li>- Annamaria Santucci, Officer, Office of the Diplomatic Advisor</li> <li>- Alberto Castronovo, Head of the Internationalization Unit, Cabinet Office</li> </ul>
<p>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호석 서기관 등</li> </ul>	

□ 면담사진

○이탈리아 기업부 면담





## 2. 이탈리아 정부의 핵심원자재 공급망 정책과 MIMIT의 이행체계

- 이탈리아는 EU CRMA 이행을 계기로 핵심원자재 관련 국내 거버넌스, 인허가 절차,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를 법제화하였음
- CRMA는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 기준으로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역량을 확보하고, 특정 제3국에 대한 의존도가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sup>13)</sup>
- 또한 핵심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전략 프로젝트 지

13) European Commission, “Critical Raw Materials Act,”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accessed May 8, 2026.

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활용 및 순환경제 촉진, 공급망 모니터링 및 비축 협력 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2024년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핵심원자재에 관한 긴급 조치」를 도입하고, 핵심원자재 관련 인허가 및 공급망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음
-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 6월 25일 법령명령 제84호를 통해 핵심원자재 관련 긴급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EU CRMA의 목표와 기준에 맞추어 국내 광업·원자재 관련 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
  - 동 조치는 핵심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국가 탐사프로그램, 기업·가치사슬 등록체계, 비축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전략 핵심원자재 프로젝트에 대해 추출 및 재활용 분야는 MASE 내 단일 접점, 가공·전환 분야는 MIMIT 산하 UMASI를 단일 접점으로 두도록 규정하였음
  - MIMIT 산하 투자유치·투자애로 해소 전담조직인 UMASI는 전략 핵심원자재 가공·전환 프로젝트의 단일 접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단일 인허가는 최대 10개월 이내에 발급되고 관련 행정행위는 단일 절차를 통해 처리됨
- MIMIT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산업정책의 일부로 접근하면서, 공급망 모니터링과 산업수요 파악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MIMIT는 MASE와 함께 핵심원자재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해당 협의체는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경제적·시장 여건 조성, 공급망 지속가능성, 순환성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4년 핵심원자재 관련 조치에 따라 MIMIT에는 ‘핵심·전략 원자재 기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해당 위원회는 핵심원자재 공급망의 경제적·기술적·전략적 모니터링, 기업의 조달 수요 파악, 잠재적 공급위기 예방·관리, 비축 수준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었음
- 또한 MIMIT는 전략산업에서 핵심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과 가치사슬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등록체계 구축, 산업수요 분석, 공급망 리스크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이는 핵심원자재 정책이 수입선 확보뿐 아니라 국내 산업수요, 기업 공급망 정보, 전략산업별 원자재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탈리아는 국내 자원 탐사와 순환자원 활용을 병행함으로써 핵심원자재 공급기반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2025년 승인된 이탈리아 국가 일반광물탐사프로그램은 14개 연구 프로젝트와 추출폐기물 매장지 지도화 등을 포함하며, MASE와 MIMIT가 ISPRA 지질조사부에 수행을 위탁한 것으로 파악됨
  - 해당 프로그램은 리튬, 붕소, 흑연, 구리, 망간, 형석, 중정석, 장석, 안티몬, 텅스텐, 티타늄, 비스무트, 비소, 마그네슘, 희토류, 백금족 금속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이탈리아가 핵심원자재 확보를 단순한 해외 조달 문제가 아니라 국내 탐사, 폐자원 활용, 재활용, 산업수요 관리가 결합된 공급망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함
  
- 재정·투자 측면에서는 ‘Made in Italy 국가기금’과 CDP 등을 활용하여 전략산업 및 핵심원자재 관련 공급망을 지원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Made in Italy」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약 10억 유로 규모의 공공재원을 포함한 ‘Made in Italy 국가기금’을 설치하고, 시행령을 통해 핵심원자재의 추출, 가공·전환, 조달, 재활용, 재사용, 유통 등을 전략적 지원 분야로 구체화하였음<sup>14)</sup>
  
- 또한 MIMIT와 국영 투자기관인 Cassa Depositi e Prestiti(CDP)는 Invest EU 프로그램의 틀에서 에너지·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원자재 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분석을 위한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3. 면담 내용

- MIMIT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이탈리아 제조업 경쟁력 및 산업안보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 면담에서는 핵심원자재가 친환경 전환, 디지털 전환, 방위산업, 항공우

---

14) 지원 대상에는 핵심원자재의 추출, 가공, 전환, 조달, 재활용, 재사용, 유통 등이 포함되어 있음

주산업 등 전략산업 전반에 투입되는 기초 소재라는 점에서, 원자재 수급 문제를 넘어 산업정책 및 경제안보와 연계되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이에 따라 MIMIT는 핵심원자재 정책을 개별 광물의 조달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회복력 확보, 기업 수요 파악, 가공·전환 역량 강화, 순환자원 활용 등과 연계하여 접근하고 있음
  - 이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정책이 원자재 확보뿐 아니라 산업생산 기반 유지,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연결되는 산업정책적 과제에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탈리아는 EU CRMA 이행 과정에서 핵심원자재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면담에서는 CRMA 시행 이후 이탈리아가 핵심원자재 관련 국내 법·제도 체계를 정비하고, MIMIT와 MASE를 중심으로 추출, 가공·전환, 재활용 단계별 담당체계를 마련한 점이 주요하게 논의됨
  - 특히 MIMIT는 전략 핵심원자재의 가공·전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단일 접점 역할을 수행하며, 전략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정책에서 산업부처의 역할이 기업지원에 한정되지 않고, 전략산업의 원료·소재 공급 안정성 관리와도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줌

- MIMIT는 공급망 모니터링과 산업수요 분석을 핵심원자재 정책의 중요한 기반으로 보고 있음
  - 이탈리아는 핵심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산업에서 원자재를 사용하는 주요 기업과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접근은 핵심원자재 정책이 비축량 확대나 해외자원 개발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떤 원자재가 어느 가치사슬 단계에서 병목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배터리, 항공기, 모바일 전자기기, 로봇 관련 장비, 재생에너지 설비,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원자재 사용기업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는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성 분석에도 참고할 수 있음
  
- 이탈리아는 국내 탐사, 재활용, 순환자원 활용을 결합하여 핵심원자재 공급기반을 다변화하고 있음
  - 면담에서는 이탈리아가 CRMA 이행을 위해 국가 탐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존 광산 및 추출폐기물에 포함된 핵심원자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음
  - 특히 신규 광산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환경영향 및 지역사회 수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추출폐기물 등 기존 자원과 순환자원을 활용하여 핵심원자재를 회수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함께 논의되었음

- 이와 같은 접근은 핵심원자재 확보 전략에서 국내 탐사와 해외 조달뿐 아니라, 재활용 및 산업공정 내 순환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탈리아는 대외협력 측면에서도 핵심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테이 계획 (Piano Mattei)’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틀로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공급과 활용을 주요 협력 영역에 포함하고 있음
  
- 다만 마테이 계획은 특정 핵심원자재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및 자원·에너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대외협력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면담에서는 핵심원자재 확보와 관련한 대외협력이 자원보유국과의 단순 수입계약에 한정되기보다, 현지 인프라 구축, 산업협력, 기술협력, 투자·금융지원, 지속가능성 기준 등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음
  
-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때도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관계를 단기 조달 중심이 아니라 장기 산업협력 및 상호 이익 기반의 파트너십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4. 입법·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검토과제

-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은 해외 조달을 보완하여 국내 가공·정제, 재활용, 비축, 산업수요 관리까지 포괄하는 집행체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 MIMIT 사례는 핵심원자재 정책이 해외 광산 지분 확보나 수입선 다변화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 탐사, 가공·정제, 재활용, 기업 수요 파악,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 투자지원 등을 포함하는 산업 정책적 관리체계와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도 배터리, 반도체, 방위산업,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의 원료·소재 공급 안정성이 산업경쟁력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핵심광물 정책을 해외 조달, 국내 비축, 가공·정제, 재자원화, 수요기업 관리가 결합된 구조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통상부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낮추며,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대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따라서 기존 정책목표가 실제 산업현장의 수요, 가공·정제 역량, 재활용 기반, 비축체계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세부 이행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핵심광물 관련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전담 창구와 인허가 조정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는 CRMA 이행 과정에서 추출, 가공·전환, 재활용 단계별 소관 기관을 구분하고, 전략 핵심원자재 가공·전환 프로젝트에 대해 MIMIT 산하 UMASI가 단일 접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전략 핵심원자재 가공·전환 프로젝트의 단일 인허가는 1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발급되며, 관련 행정행위는 단일 절차를 통해 처리됨
    - 이는 핵심원자재 관련 투자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조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핵심광물 가공·정제, 재활용, 비축시설, 전략산업 소재 생산시설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권한과 절차가 분산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담 창구, 인허가 협의 절차, 금융지원 연계 방식 등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셋째, 순환자원과 재활용을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의 보완수단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는 국내 광물자원 탐사와 함께 추출폐기물 매장지 지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승인된 국가 광물탐사프로그램은 14개 연구 프로젝트와 추출폐기물 매장지 지도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사용후 배터리, 희토 영구자석, 전자폐기물, 산업 부산물 등에 포함된 핵심광물 회수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전략산업 소재 공급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MIMIT의 국내 이행체계 사례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FORGE)<sup>15)</sup> 등 다자협력체의 프로젝트 협력 기능을 연계하여, 국내 수요기업·가공정제·재활용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실행형 협력체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탈리아 MIMIT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국내 인허가 및 산업 지원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재활용, 저장, 전략산업 가치사슬 강화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음
  - 이러한 접근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단순한 조달계약 확대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 산업수요와 연계된 프로젝트 발굴, 기업 참여, 정책 금융, 재자원화 협력, 공동 투자구조 등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FORGE 등 다자협력체 참여를 외교적 협력 채널로만 운영하기보다, 예컨대 국내 핵심광물 수요기업, 가공·정제 기업, 재활용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체계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다자협력체 기반 공급망 협력은 참여국 간 산업구조, 자원보유 여건, 환경·노동 기준, 시장가격 변동성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력 대상 광종, 프로젝트 유형, 금융지원 방식, 국내 기업 참여 조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5) 2026년 2월 미국 국무부 주최 제1차 핵심광물 장관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미국 주도 다자협력 프레임워크로,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계승·확대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안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조율 및 프로젝트 단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5. 이탈리아 기업·산업·생산부(MIMIT)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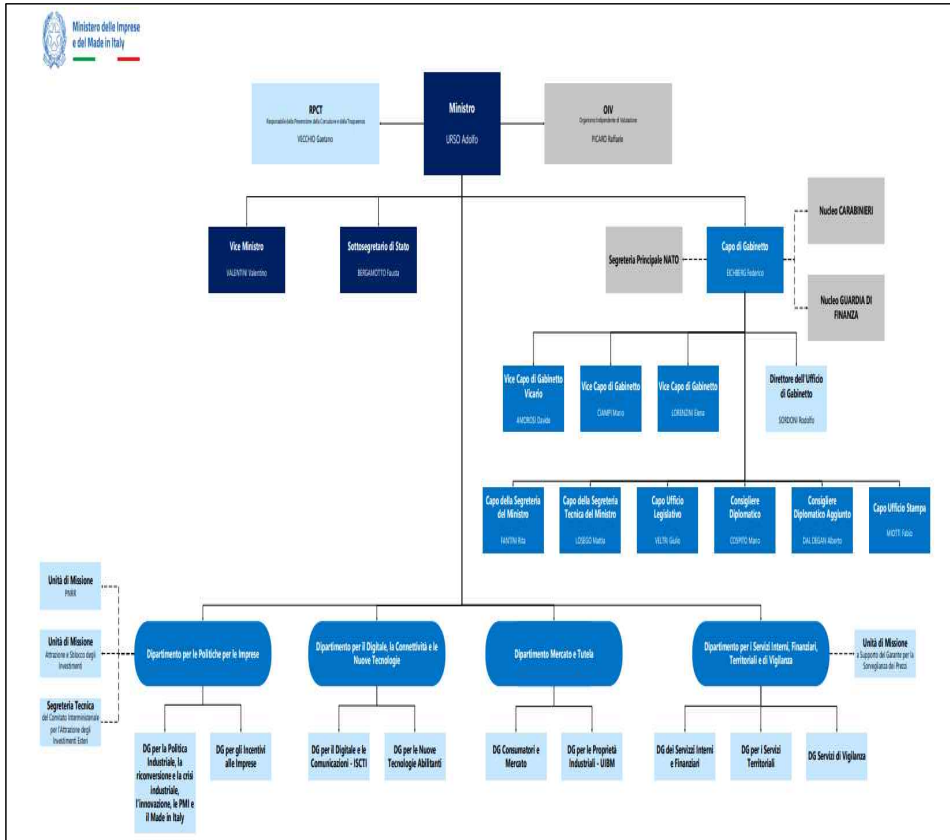
- 이탈리아 기업·산업·생산부(MIMIT, Ministero delle Imprese e del Made in Italy)는 이탈리아의 산업정책, 기업정책, 중소기업 지원, 산업전환, 기술혁신 및 ‘Made in Italy’ 경쟁력 강화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임
- MIMIT는 이탈리아 생산체계의 경쟁력 제고, 산업 부문별 정책 수립, 기업 혁신, 중소기업 지원, 산업위기 대응, 유럽 및 국제 산업협력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sup>16)</sup>
- MIMIT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탈리아 고유의 제조업·브랜드·기술 기반을 보호·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Made in Italy’ 관련 정책을 통해 이탈리아 제조업과 전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최근 MIMIT는 EU 산업정책 및 경제안보 논의와 연계하여 핵심원자재, 에너지·디지털 전환, 자동차, 반도체,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EU CRMA 시행 이후 MIMIT는 핵심원자재의 가공·전환, 전략 프로젝트, 산업수요 모니터링, 공급망 회복력 제고 등과 관련된 국내 정책 대응에 관여하고 있음
- 2026년 5월에도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의에서 CRMA, 전략적 원자재 저장기지 유치 가능성, 유럽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16) 특히 기업정책 담당 부서 산하 산업정책 관련 총국에는 기업 디지털화, 녹색 기술, 해양경제, 중소기업, 유럽·국제 산업협력, 산업전환, 철강·화학, 지속가능한 이동성, 항공우주·방산 등 산업 분야별 조직이 설치되어 있음

바 있음

- 이탈리아는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로서 핵심원자재 공급 불안이 자동차, 기계, 항공우주, 방위산업,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MIMIT는 핵심원자재 정책을 단순한 자원 확보 문제가 아니라 산업경쟁력, 공급망 안정화, 전략산업 보호와 연계된 경제안보 의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MIMIT 조직도 현황(2026.2.2.)]



\*자료: MIMIT, “Organigramma grafico”, <<https://www.mimit.gov.it/amministrazione-trasparente/organizzazione/organigramma-grafico>> (검색일: 2026.5.2.).

## VI. 오스트리아 의회 법률 · 입법 · 조사서비스(LLR) 방문

### 1. 오스트리아 의회 법률 · 입법 · 조사서비스(LLR) 방문 개요

#### 가. 방문 목적 및 방문 일자

##### □ 방문 목적

- 입법조사처와 오스트리아 의회 법률·입법·조사서비스(LLR: Legal, Legislative and Research Services) 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방문함. 특히 올해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여의사와 더불어 의회조사기구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 방문 일자

- 일자 : 2026년 4월 24일(금) 15:00 ~ 16:30
- 장소: 오스트리아의회 5호실

#### 나.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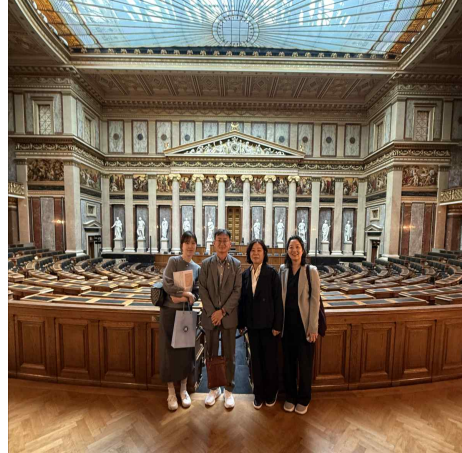
국회입법조사처	오스트리아의회 LL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관후 입법조사처장</li> <li>- 구슬이 환경노동팀 팀장</li> <li>-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li> <li>- 김수정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rlinde WAGNER 법률·입법·조사서비스 부서장</li> <li>- Christoph KONRATH 의회사무 조사지원 과장</li> <li>- Christof RATTINGER 공법 및 입법과 부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Estelle COLLONNIER 의회협력과 부과장</li><li>- Patricia STEINER 의전 및 조직과 자문관</li></ul>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현정 공사	

□ 면담사진

○ 오스트리아의회 법률·입법·조사서비스(LLR)





## 2.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및 의회조사기구 협의체 구성 현황

### 가. 입법조사처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최 현황

#### □ 개최 목적

- 2007년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표적인 의회조사기구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입법조사처에서는 주요국 의회조사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의정활동 지원의 모범 사례·경험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주요 입법·정책 현안 논의를 통한 의정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개최하고 있음

#### □ 개최 현황

- 2010년 이후 14차례 걸쳐 의회조사기구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2025년도에는 14차(10.20.~10.22)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 입법정책 동향과 불평등 완화와 의회의 역할이었음. 당시 참가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18개 국가에서 33인이 참가하였음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최 현황]

<1차> 2010.12.6.~12.9.

- 주제: 각국 의회 및 의회조사기구 소개, 아시아 지역 의회조사기구간 협력방안
- 참가국: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몽골, 베트남, 한국(6개국, 15인)

<2차> 2011.11.1.~11. 4.

- 주제: 각국 의회 및 의회조사기구 소개, 아시아 지역 의회조사기구간 협력방안
- 참가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5개국, 20인)

<3차> 2012.6.27.~6. 29.

- 주제: 각국 의회 본회의 제도 소개
- 참가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한국(10개국, 49인)

<4차> 2013.10.31.~11. 2.

- 주제: 참여국 의회 의정활동 지원 사례 및 유형, 여성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현황과 발전방향
- 참가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란, 일본, 호주, 한국(17개국, 59인)

<5차> 2014.11.20.~11.22.

- 주제: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입법영향분석 등 각국의 입법·정책 분석 제도와 사례
- 참가국: 캄보디아, 이란,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위스,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한국(10개국, 30인)

<6차> 2015.11.17.~11.19.

- 주제: 의회-행정부 관계
- 참가국: 호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스웨덴, 태국, 터키,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한국(12개국, 32인)

<7차> 2016.11.8.~11.10.

- 주제: 의회조사연구의 쟁점과 과제
- 참가국: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몽골, 스웨덴, 체코,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캄보디아, 우간다, 한국(15개국, 35인)

<8차> 2017.11.8.~11.10.

- 주제: 의회와 국민 간의 소통 증진을 위한 역할과 과제, 초국가적 의제해결을 위한 의회간 협력방안
- 참가국: 캄보디아, 캐나다, 체코, 독일,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몽골, 네덜란드, 필리핀, 폴란드, 태국, 터키, 우간다, 미국, 한국(17개국, 29인)

<9차> 2018.11.7.~11.9.

- 주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사회와 국민생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방안
- 참가국: 호주,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체코, 유럽연합, 독일,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러시아, 태국, 터키, 우간다,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한국(22개국, 45인)

<10차> 2019.11.6.~11.8.

- 주제: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조사기구의 기능 및 역할,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평가, 의회외교 발전을 위한 전략
- 참가국: 오스트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쿠웨이트,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스웨덴, 태국, 터키, 미국, 한국(22개국, 38인)

<11차> 2022.05.17.

- 주제: 코로나19의 도전과 대의민주주의 대응, 코로나19의 대응과 의회의 역할(경제분야), 코로나19의 대응과 의회의 역할(사회분야)
- 참가국: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체코, 유럽연합, 독일, 인도, 이란,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태국, 우간다, 영국,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한국 (21개국, 35인)

<12차> 2023.10.16.~10.18

- 주제: 입법영향분석과 의회조사기구, AI와 의회조사기구
- 참가국: 알제리, 오스트리아, 체코, EU,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

아, 일본,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스웨덴, 튀르키예, 우간다, 영국, 미국, 베트남, 한국(24개국, 35인)

<13차> 2024.10.14.~10.16

- 주제: 정치 양극화와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 참가국: 미국, 유럽의회조사처,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몽골,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알제리, 우간다, 네팔(21개국 37인)

<14차> 2025.10.20.~10.22

- 주제: 기후위기 대응 입법정책 동향, 불평등 완화와 의회의 역할
- 참가국: 네팔, 몽골, 인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튀르키예, 파키스탄, 유럽의회,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알제리, 캐나다, 한국 (18개국 33인)

## 나. 의회조사기구 협의체 구성 계획

### 설립 목적

- 입법조사처에서는 국제적 입법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입법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조사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 공동 대응하고자 함

### 추진 개요

- 국제적 입법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 각국 의회조사기구가 수행하는 정책조사·분석 결과, 연구방법론, 입법평가 사례 등을 교류하여 입법지원기관의 전문성 제고
  - 각국 의회조사기구 간 정기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글로벌 입법 동향

분석 및 파악

- 국제 의제(기후변화, 인구고령화, AI 규제 등)에 대한 공동연구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
- 의회조사기구 간 제도적 기반 구축
  - 기존 국제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실무 네트워크를 상설화하여 신뢰성 있는 협력채널 확보
  - 향후 상설기구화를 추진하여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조사 기구간 교류 활성화

□ 단기) 협의체 운영

- 협의체 구성 계획(안)
  - 총 10개국(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네팔, 몽골, 파키스탄)
  - 올해 추가로 참여할 국가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협의체 회의 운영

- 정기회의: 매년 국제세미나 기간으로 대체(연 1회)
- 실무회의(수시): 분기별 온라인 및 서면회의 개최

□ 협의체 활동

- 차기 국제세미나 세션별 주제 선정
- 국제세미나 개최 시 제3세션으로 협의체 회원국이 제안한 국제적 긴급 현안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세션 운영(참여국 브리핑 및 좌장 역

할 수행)

- 차차기 국제세미나 개최국 선정 논의
- 정책조사·분석 결과 및 입법평가 사례 등을 교류하여 입법서비스 품질 향상
- 협의체 간 조사기구를 상호 방문하여 조사기법 및 제도운영 현황 공유
- 정기적으로 주요 정책조사·연구 동향 및 성과 공유
- 협의체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 마련 및 개정

### 3. 면담 내용

- 오스트리아의회에서는 한국의 입법조사처와 같이 별도의 입법조사기구는 없고, 의회 소속의 사무국(LLR)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 오스트리아의회 소속인 법률·입법·조사 서비스(LLR: Legal, Legislative and Research Services)는 다섯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① 공법 및 입법, ② 의회 사무 조사·지원, ③ 의회 예산처, ④ 의회 행정 법무, ⑤ 디지털화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 해당 부서들은 국민의회, 연방의회, 의회 행정처의 업무를 법률·경제·사회과학 전문지식으로 지원함

- LLR은 과학적·전문적 논의의 최전선에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함. 그리고 LLR은 공정하고 중립적임. LLR이 제공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의회 웹사이트의 "Fachinfos" 섹션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를 통해 구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의원, 원내 교섭단체, 의원 보좌진, 의회 직원 및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 의회 관련 정보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 또한, LLR은 의회 프로젝트 및 사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함. 특히 공공조달 절차 및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함
  
- 입법조사처에서 2026년 10월에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주제와 형식에 대한 각 국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추천할 주제가 있는지?
  
- 입법조사처에서 올해 10월 개최되는 국제세미나의 주제로 “AI의 발전과 민주주의, 특히 의회의 전문성 측면에서 도전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회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란 주제를 다룰 것을 추천함
  - AI가 각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정치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에서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의회에서도 진행 중에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학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음
  
- 올해부터는 국제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입법조사처에서 “의회조사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오스트리아의회 사무

국을 방문하여 올해의 국제세미나 계획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자 함

- 오스트리아의회에서는 조사처가 마련하려는 의회조사기구 협의체 구성 시 참여할 의사가 있음.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10개 국가에서 참여의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4. 오스트리아의회 법률·입법·조사서비스(LLR) 소개

□ 오스트리아의회 법률·입법·조사 서비스(LLR: Legal, Legislative and Research Services)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LLR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헌법, 법률 및 정치 체계

- LLR은 국민의회 의장, 연방의회 의장, 의회 행정처에 자문을 제공함. 주요 분야는 헌법 및 행정법, 의회법,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형법, 공조달법임
- 2025년부터는 디지털화 법률(특히 AI법, 데이터법, IT 보안법)도 중점 분야로 추가됨. 또한 정치학 및 학제간 사회과학도 다루고 있음
-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지원 외에도, 현안 및 근본적인(특히 의회 관련)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법률 검토, 전문가 의견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함

## ○ 입법 지원

- 의회법 분야에서 LLR은 국민의회 의장을 대신하여 법안을 작성하고 입법 요건 준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 의회 실무 그룹을 입법 전문 지식으로 지원하며 연방 공무원의 입법 교육에도 기여함

## ○ 예산 및 공공 재정 분석

- 의회 예산처는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비정부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회의 감독 역할을 지원함. 주요 임무는 예산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 (입법) 제안, 재정 정책, 경제 및 예산 사안에 대한 분석을 제공함
- 모든 분석 자료는 웹사이트에 공개됨. 이를 통해 국민의회와 정부 간의 예산 사안에 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에 기여함

## ○ 미래예측 및 기술영향평가 (FTA)

- 우수한 과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원들에게 FTA 분야의 전문 지식과 자문도 제공됨.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연구 의뢰를 제안할 수 있음

## ○ 국제 비교 연구 및 정보

-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오스트리아 국내외의 관련 기관과 정보를 활발히 교류함. 특히 주목할 만한 기관은 유럽 의회 조사·문서 센터(ECPRD)임
- 비교 연구는 국민의회 의장 또는 의회 행정처의 위탁을 받아 수행됨. 다만 의원, 위원회, 실무 그룹도 국민의회 의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네트워크 내에 이미 정보가 있는 경우 LLR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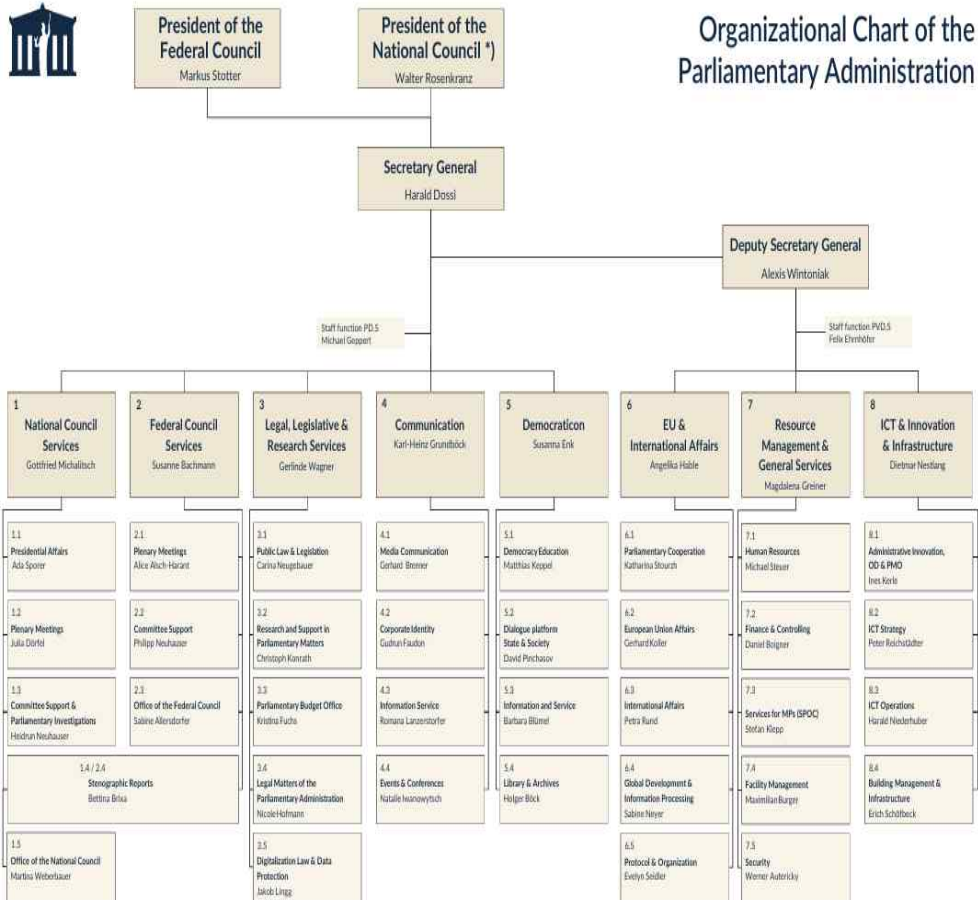
○ 의회 조사

- 여러 조율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의회 및 의회주의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발전을 지원함. 의회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LLR은 공개 접근 가능한 "의회 조사 디지털 참고문헌"을 제공함
- 매년 의회 실무 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회 조사의 날" 행사가 개최됨. 1년간 의회 관련 사안을 다루는 연구 프로젝트에 재정적·내용적 지원이 이루어짐

○ 디지털 리터러시

- 의회 행정처의 디지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법적·윤리적·사회기술적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여기에는 관련 법적·디지털 역량을 개발·적용하고, 디지털 주권과 민주주의 및 사회에 이로운 책임감 있고 효율적이며 법적으로 준수하는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됨

[오스트리아의회 행정조직 기구표]



\*자료: Austria Parliament, Organization Chart of Parliamentary Administration, <[https://www.parlament.gv.at/dokument/unterlagen/Organigramm\\_ENG.pdf](https://www.parlament.gv.at/dokument/unterlagen/Organigramm_ENG.pdf)>(검색일: 2026.5.8.)

## VII. 오스트리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면담

### 1. 오스트리아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면담 개요

#### 가. 방문 목적 및 방문 일자

##### □ 방문 목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활동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 방문 일자

- 일자 : 2026년 4월 24일(금) 17:00 ~ 18:00
- 장소: 오스트리아 빈 시내 회의실

#### 나. 참석자

국회입법조사처	오스트리아 지역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관후 입법조사처장</li> <li>- 구슬이 환경노동팀 팀장</li> <li>-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li> <li>- 김수정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향만 오스트리아 지회장</li> <li>- 이상화 오스트리아 지회장 간사</li> <li>- 이호승 중동부유럽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등</li> </ul>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현정 공사	

□ 면담사진

○ 오스트리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면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협의회 현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해외 45개 지역(137개국)에서 지역협의회 운영하면서, 평화통일정책 관련 주요 역할 수행
- (설치) 광역지자체, 이북5도 및 해외권역별로 지역회의 설치(법 제29조)
  - (국내) 18개 지역회의 (서울지역회의 등 17개 시·도별 지역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 (해외) 5개 지역회의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 (구성) 지역회의는 해당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

[해외 지역회의]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수
일본	4
중국	5
아시아·태평양	7
미주	20
유럽·중동·아프리카	9

□ 해외 지역회의 주요 사업

-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자문위원의 통일 역량강화, 통일공공외교 활동, 재외동포사회의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청년·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 지역 전문가·단체와의 연대협력 및 통일논의 활성화,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등

### 3. 면담 내용

- 오스트리아지회는 중동부유럽 지역협의회 소속임. 현재 중동부유럽은 자문위원 72명으로 구성됨
- 중동부유럽 지역협의회 소속 국가는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임

- 오스트리아지회는 자문위원, 현지인 및 동포들을 대상으로 통일과 애국심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행사 및 세미나를 통해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지회의 주요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음

[오스트리아지회의 주요 활동 및 계획]

민주평통 21기 (2023.9~2025.8) 오스트리아			
일시	주요 활동	위치	비고
2024.4	통일기원 평화음악회	오스트리아, 빈	빈 야마하 콘서트홀에서 개최
2024.6	North Korea in Cyberspace	오스트리아, 빈	세미나 및 토론
2024.8	1st Vienna Peace Walking Tour	오스트리아, 빈	빈 시와 협력하여 개최
2024.11	세계 청년 컨퍼런스	폴란드, 바르샤바	행사 지원, 음악회 기여
2024.12	웅변대회 시상	온라인	위원 대상: 이호승, 어린이 대상: 김이현
2025.6	2nd Vienna Peace Walking Tour	오스트리아, 빈	빈 시와 협력하여 개최
2025.6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오스트리아, 빈	세미나 및 토론
2025.6	Social Integration of	오스트리아,	세미나 및 토론

	Immigrants	빈	
민주평통 22기 (2025.11~2027.10) 오스트리아			
일시	주요 활동	위치	비고
2026.2	신년 음악회 / 1 분기 정기총회	오스트리아, 빈	중동부유럽협의회, 오스트리아한인회, 한-오 친선협회와 공동 개최
2026.4	평화통일데이 - 3rd Vienna Peace Walking Tour / 폴란드로 간 아이들 (2018) 시사회	오스트리아, 빈	민주평통 최초로 지원, 빈 시와 협력하여 개최
2026.5	한.폴 청년세대 평화.인권 포럼 / 2분기 정기 총회	폴란드, 카토비체/크라쿠프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 시사회 및 감독과의 직접 대화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과 평화포럼
2026.9	남북 명절 밥상	오스트리아, 빈	빈 벨트뮤지엄 장소협조
2026.10	북한 경제 특강	오스트리아, 빈	비엔나국립대학교 협조
2027.1	신년 음악회	오스트리아, 빈	
2027.4	유럽 지역 평화공존 공동성장 공공외교 워크숍	미정	4개 지역 협의회 협력(영국, 중동부유럽, 남유럽, 북유럽) 특강 주제: 유럽의 민주주의, 통일한국의 의료 시스템
2027.5	4th Vienna Peace Walking Tour	오스트리아, 빈	
2027.9	평화 아리랑 음악회	오스트리아, 빈	

\* 자료: 오스트리아지회 내부자료

-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은 다음과 같음
  - 평화통일에 대한 2세들의 이해가 부족한 점, 특정 지역에 바라는 아이디어나 방향 제시 및 정보 공유가 부족한 점이 있음
  - 또한 협의회를 통해 한국 본부로 연락을 하는 구조가 다소 비효율적임. 지회에서도 주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을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의 민주평통 활동의 우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VIII. 오스트리아 KOTRA 빈 무역관 방문 및 기업간담회

### 1. 오스트리아 KOTRA 빈 무역관 방문 및 기업간담회 개요

#### 가. 방문 목적 및 방문 일자

##### □ 방문 목적

- 오스트리아는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및 중·동부 유럽 산업공급망과 연계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및 중부유럽 공급망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
- 첫째, KOTRA 빈 무역관 면담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최근 경기 전망, 제조업 및 산업재 시장 특성, 한국기업 진출 현황, 현지 바이어의 수요 변화, 물류·공급망 여건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둘째, AIRZETA 및 SC.MIN Innovation 등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전략산업 화물의 항공물류 여건, 중동 리스크에 따른 운송 변수, 한국산 철강·구리계 중간재의 유럽 공급망 내 역할, EU 탄소·공급망 규제 대응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 셋째, 우리 기업의 대오스트리아 및 중부유럽 시장 진출전략을 검토하고, 핵심광물·금속소재·전략산업 공급망 측면에서 오스트리아가 가지는 산업적·정책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함

□ 방문 일자

- 일자 : 2026년 4월 27일(월) 10:00 ~ 12:00
- 장소: KOTRA 빈 무역관 회의실

나. 참석자

국회입법조사처	오스트리아 KOTRA, 기업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관후 입법조사처장</li> <li>- 구슬이 환경노동팀 팀장</li> <li>-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li> <li>- 김수정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은희 KOTRA 빈 무역관장</li> <li>- 이소이 KOTRA 빈 과장</li> <li>- AIRZETA 박지승 지점장</li> <li>- SC.MIN Innovation 이규섭 법인장</li> </ul>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현정 공사	

□ 면담사진

○ 오스트리아 기업간담회 면담



## 2. 오스트리아 경제 동향

□ 오스트리아는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경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를 보이는데, 시장지향경제 기준으로 2023~24년 오스트리아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약 245.7만 명을 고용하며, 약 5,240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오스트리아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고용, 생산,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오스트리아 주요 경제 지표]

구분	경제성장률 (실질)	실업률	민간소비 증가율	물가 상승률	GDP 대비 국가부채	수출증감 (실질)	수입증감 (실질)
'25년 (잠정)	0.5	7.4	0.7	3.5	-	-0.7	1.4
'26년 (전망)	1.2	7.3	0.8	2.6	-	1.2	1.4

\*주: 실업률은 오스트리아 국가 정의 기준임

\*\* 자료: 오스트리아 재정부(2025.12.); KOTRA 빈 무역관 간담회 자료(2026.4.)

-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오스트리아 경제는 2년간의 역성장 이후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0.5%를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6년에는 수출 회복과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부문도 장기 부진 이후 2025년 말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2026년에는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라 완만한 회복이 예상됨
- 오스트리아는 가족기업, 장기 경영, 고속련 기술, 특정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틈새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산업기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오스트리아 산업은 기계·설비, 철강·금속, 자동차 부품 등 투자재 및 중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음

- 오스트리아는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고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로서, 대량 소비재보다는 기술집약적 중간재와 투자재 산업에서 경쟁력을 형성해 왔음
  -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금속, 일반기계, 정밀기계, 환경·에너지 기술, 관광산업 등을 들 수 있음
-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대량생산보다 부품, 엔진, 구동계, 위탁생산, 고부가가치 기술공급 분야와의 연계성이 크며, 철강·금속 및 기계산업은 자동차·건설·에너지·플랜트 산업과 연결되어 오스트리아 제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전기차 전환도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오스트리아 통계청 기준 2025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60,651대로, 전체 승용차 신규 등록 284,978대의 약 21.3% 수준임
  - 이는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전력 인프라, 충전설비 등 관련 공급망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음
- 특히 오스트리아는 지리적으로 중부유럽에 위치하고 독일 및 중·동유럽 제조업 공급망과 연계되어 있어, 단순 내수시장보다 중부유럽 제조업 공급망의 연결점으로서 의미를 가짐<sup>17)</sup>

□ 한-오스트리아 교역은 자동차·전자·정밀기계 등 제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5년 한-오스트리아 교역 규모는 약 27.3억 달러로, 한국의 대오스트

17) 이러한 구조는 오스트리아가 단순 내수시장보다 중부유럽 제조업 공급망의 연결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줌

리아 수출은 11.2억 달러, 수입은 16.0억 달러 수준으로 파악됨

- 2025년 기준 한국의 대오스트리아 수출은 전년 대비 20.9% 감소하였고, 수입은 1.5%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약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이는 오스트리아가 단순 소비시장이라기보다 자동차, 전기·전자, 정밀기계, 금속소재 등 제조업 공급망을 통해 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의 對 오스트리아 교역 현황]

국가	2022		2023		2024		2025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1,421	9.3	1,027	△27.7	1,420	38.2	1,123	△20.9
수입	2,173	10.6	1,916	△11.8	1,629	△15.0	1,604	△1.5
교역 규모	3,594	-	2,943	-	3,049		2,727	
수지	△752	-	△889	-	△209		△482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검색일: 2026. 5.2.).

- 오스트리아의 산업정책은 최근 제조업 경쟁력 회복, 경제안보, 공급망 회복력,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6년 1월 「오스트리아 산업전략 2035」를 발표하고, 2035년까지 오스트리아를 세계 10대 경쟁력 보유 경제권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동 전략은 국제경쟁력 강화, 유럽과 연계한 경제주권 발전, 혁신역량

제고, 경제회복력 강화, 지속가능·순환 생산 강화, 숙련인력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114개 세부조치와 9개 핵심기술·강점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데이터 혁신, 반도체·전자부품, 첨단제조·로봇, 생명과학·바이오기술, 양자·광자, 첨단소재, 에너지·환경기술, 모빌리티 기술, 우주·항공기술 등을 주요 분야로 설정하고 있음. 2026~2029년에는 9개 핵심기술 및 강점 분야에 26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임
- 특히 산업전략은 오스트리아 산업의 탈산업화를 방지하고 재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이는 오스트리아가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줌
- 아울러 오스트리아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총 최종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3.0%,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90.1% 수준으로 파악됨
  - 2030년까지 전력소비 전력 기준 신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력망, 에너지저장, 전력기기, 구리·금속소재 등 관련 공급망 수요와도 연결될 수 있음
- 그 중에서 핵심광물 및 원자재 공급망은 오스트리아 산업경쟁력 유지와 친환경·디지털 전환의 주요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원자재 마스터플랜 2030」을 통해 1차 및 2차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계획은 국내 자원 공급, 국제 공급원 확보, 지능형 생산·순환경제·고부가가치 기술 활용을 주요 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정학적·경제적 충격, 팬데믹,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오스트리아는 EU CRMA의 틀 안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 CRMA가 유럽 공급망 강화, EU 수입 다변화, 가치사슬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3. 간담회 주요 내용

#### 가. AIRZETA 간담회: 빈 화물 허브와 전략산업 물류 공급망

- 이번 간담회에서는 AIRZETA의 빈 화물허브 운영 현황과 아시아-유럽 항공화물 네트워크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 AIRZETA는 빈 공항을 유럽 지역 화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과 빈을 연결하는 정기 화물노선을 통해 한국과 중부유럽 간 고부가 산업화물 운송을 담당하고 있음
- 빈 공항은 중부유럽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항공화물 처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및 주변 유럽 국가 간 화물 이동의 연결점

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AIRZETA의 정기 화물운항은 이러한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요소로 볼 수 있음

- 특히 주요 취급 화물에는 자동차부품, 배터리 소재, 전자제품, 의약품, 전자상거래 화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선은 일반 소비재 운송뿐 아니라 전략산업 관련 화물의 안정적 이동과도 관련성이 있음
  
- 면담에서는 중동 공역 및 제트연료 리스크가 항공화물 운송의 잠재적 변수이나, 면담 당시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항공화물 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운송시간이 짧고 고부가·시간민감 화물 운송에 적합하나, 공역 제한, 우회운항, 연료비 상승, 항공보안 및 안전규정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중동 및 페르시아만 인근 공역의 불안정성이 제기되면서, 아시아-유럽 항공화물 노선에서도 우회운항 가능성, 제트연료 비용, 운항 일정 안정성 등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다만 AIRZETA와의 면담 결과, 현재 오스트리아 및 빈 화물허브 운영 측면에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운항 또는 물류 처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빈 공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내 화물 연계와 지상 물류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오스트리아 항공화물 시장 전반에 직접적·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음

- 이에 따라 이번 면담에서는 지정학적 상황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향후 공역 불안, 연료비 변동, 우회노선 발생 가능성 등이 항공화물 운송의 안정성, 운임, 운항계획 및 고객 대응에 미칠 수 있는 실무적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 AIRZETA와의 간담회는 핵심광물 및 전략산업 공급망 논의가 채굴·정련 단계뿐 아니라 운송·보관·통관 등 물류단계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핵심광물 공급망은 일반적으로 광산 개발, 정련·가공, 재활용, 비축을 중심으로 논의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배터리 소재, 전구체, 전자부품, 특수화학품 등이 국경을 넘어 적시에 이동해야 하므로 물류단계의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임
- 특히 배터리 소재 및 리튬배터리 관련 화물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위험물 규정, 항공사 취급역량, 지상조업 및 보관시설, 통관절차, 공항 허브의 연결성 등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AIRZETA와의 면담은 핵심광물 및 전략산업 공급망을 검토할 때, 원자재 확보뿐 아니라 항공화물 허브, 특수화물 인증, 위험물 취급역량, 대체 운송경로, 연료비 변동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화물의 국제운송 리스크를 공급망 정책

의 일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배터리, 반도체, 전자부품, 의약품, 첨단소재 등 고부가 산업의 대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으므로, 핵심광물 및 전략산업 물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조달선 다변화와 함께 국제운송 경로의 안정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럽 시장으로 향하는 전략산업 화물의 경우, 인천 - 유럽 간 직항 화물노선, 중부유럽 허브공항 활용, 위험물·특수화물 취급역량, 공역 리스크, 연료비 변동, 통관 및 지상운송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향후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광물의 생산·정련·비축뿐 아니라, 배터리 소재와 고부가 산업부품의 운송·보관·위험물 취급·허브공항 연계까지 포함하는 물류 기반 공급망 안정화 관점이 필요함

#### 나. SC.MIN Innovation 간담회: 한국산 금속 중간재의 유럽 공급망 내 역할과 EU 규제 대응 과제

- 이번 간담회는 오스트리아 및 중부유럽 금속소재 유통시장 현황과 한국산 철강·구리계 중간재의 유럽 공급망 내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SC.MIN Innovation은 한국에 기반을 둔 철강 트레이딩 기업으로, 장재·판재·반제품 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2020년 오스트리아 빈에 SC.MIN GmbH를 설립하여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금속소재 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SC.MIN GmbH는 한국산 철강 코일을 유럽 전역에 공급하고, 해상운송과 유럽 내 트럭 운송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고객사의 최종 목적지까지 납품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특히 SC.MIN GmbH는 알루미늄, 알루미늄아이드 강판 등 표면처리 철강재와 함께 구리관 제품도 취급하고 있어, 오스트리아 및 중부유럽 제조업 공급망에서 한국산 금속 중간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면담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정련 자체보다는 철강·구리 등 금속 중간재의 조달, 운송, 납기, 가격, 거래조건, EU 탄소규제 대응 등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공급망 변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함
- 면담 결과, 미·중 전략경쟁과 전략광물 수출통제는 철강·구리 중간재 거래에 직접적인 수출통제보다는 가격 변동성, 공급선 다변화 요구 등의 형태로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몬 등 전략광물에 대해 수출허가,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심사 등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배터리·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원자재의 공급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SC.MIN의 주요 취급 품목인 철강 코일 및 구리관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몬 등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통제 대상 품목과는 구분되며, 현재 해당 수출통제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면담에서는 유럽 고객사들이 단순 가격경쟁력 외에도 안정적 납기, 장기 거래관계, 원산지, 품질 일관성, 공급자의 대응 속도 등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특정 핵심광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철강·비철금속 등 산업 중간재 유통시장에서도 거래조건과 공급망 관리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줌
  
- 둘째, EU의 탄소·공급망 규제는 철강제품 거래에서 원산지, 탄소배출 정보, 공급망 문서화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집약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단계가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산 철강재를 EU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탄소배출 관련 자료, 원산지, 고객사의 신고·증빙 요구에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
  
- 반면 구리관 등 일부 비철금속 제품은 현행 CBAM의 직접 적용범위와는 다르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유럽 고객사들이 전반적으로 공급망 투명성, 원산지, 탄소정보, 재활용 가능성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금속소재 거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면담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지 바이어의 구매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기업도 EU 시장 대응을 위해 품질·가격 경쟁력과 함께 관련 서류, 인증, 납기 안정성,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셋째, 물류·유통 측면에서는 해상운송과 유럽 내 내륙운송을 연계한 안정적 납품체계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논의되었음
  - SC.MIN GmbH는 한국에서 유럽 항만까지의 해상운송과 유럽 내 트럭 운송을 결합하여 고객사의 최종 목적지까지 공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구조에서는 운임, 항만 처리, 통관, 내륙운송, 재고관리, 최소주문물량 등 실무적 요소가 거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중부유럽 시장에서는 고객사가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래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단기 현물가격 뿐 아니라 납기 신뢰도와 지속적 공급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는 한국 금속소재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단순 수출계약 체결 뿐 아니라 현지 유통거점, 물류 파트너, 재고 운영, 통관 대응, 고객사별 맞춤 납품체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SC.MIN Innovation과의 면담은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을 원광·정련 단계 뿐 아니라 금속 중간재와 유통단계까지 확장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는 리튬, 니켈, 희토류 등 개별 광물의 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는 철강재, 구리관, 표면처리 강판 등 중간재의 안정적 공급도 산업생산의 중요한 기반임
  - 특히 오스트리아 및 중부유럽은 자동차부품, 기계, 전력기기, 건설·설비, 에너지전환 산업과 연결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산 금속 소재의 유럽 공급망 내 위치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EU 진출 전략과도 관련성이 있음

- 따라서 한국의 공급망 정책은 핵심광물의 확보, 비축, 재활용뿐 아니라 금속 중간재의 조달·유통·물류·규제 대응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한국에 대해서는 금속소재 기업의 EU 시장 대응을 위해 공급 안정성, 규제 대응, 현지 유통역량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 한국 기업은 철강, 구리, 전력기기, 냉난방설비, 기계부품, 첨단소재 등 분야에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EU 시장에서는 탄소규제, 원산지, 공급망 문서화, 납기 안정성, 현지 고객 대응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EU CBAM 등 EU 규제가 철강재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핵심광물·전략원자재 논의가 구리 등 산업 중간재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은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공급망 관리 능력과 규제 대응 체계를 함께 갖출 필요가 있음
  
- 향후 입법·정책적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서 광물·원료 단계와 더불어 철강·비철금속 중간재, 유럽 현지 유통망, 물류 리스크, 탄소정보 관리, 장기 거래관계 형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오스트리아 KOTRA 빈 무역관 소개

- KOTRA 빈 무역관은 오스트리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정보 확보를 지원하는 해외 무역관임
- 오스트리아는 인구 규모는 크지 않으나, 독일어권 경제권과 중·동부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기계·철강·자동차부품·전기전자·환경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KOTRA 빈 무역관은 오스트리아 내 현지 바이어·파트너 발굴, 수출상담 및 시장정보 제공,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 파악·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오스트리아는 독일 및 중·동부 유럽 제조업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빈 무역관의 활동은 단순한 오스트리아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넘어 중부유럽 시장 진입과 제조업 공급망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음

## IX.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 1. 대사관 방문 개요

#### 가. 방문 목적 및 방문 일자

##### □ 방문 목적

-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사관을 방문하여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보완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 방문 일자

- 일자 : 2026년 4월 27일(월) 12:30 ~ 14:30
- 장소: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나. 참석자

국회입법조사처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관후 입법조사처장</li><li>- 구슬이 환경노동팀 팀장</li><li>-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li><li>- 김수정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함상욱 대사</li><li>- 이현정 공사 등</li></ul>

□ 방문사진

○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 2.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

□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 재외선거의 선거권자는 ‘해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투표권을 가진 우리 국민’으로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구분되며, 이를 합쳐서 ‘재외선거인 등’이라고 함(제218조의10제4항)

○ 먼저,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재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함(동법 제218조의5).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정해진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완료해야 함(동법 제218조의4제1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마다 각 재외공관(분관 및 출장소 포함)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동법 제218조)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각 공관에는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며, 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 사이의 기간 중 6일 이내로 실시된다. 참고로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바 있음(동법 제218조의17)
  - 아울러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수가 3만명을 초과시 매 3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총 3개소까지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동법 제218조17)
- OECD 38개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다수 국가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민권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를 투표권 행사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하는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36개국이 재외선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투표방식 측면에서 오직 직접투표 방식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아이슬란드, 튀르키예11) 등 7개국에 불과함

- OECD 회원국의 과반에 해당하는 22개국은 우편, 대리, 전자투표 등 복수의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투표 수단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며, 세부적인 운영 방식 또한 국가마다 다름<sup>18)</sup>
- 요컨대, 현행 재외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재외공관 등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반면, OECD 주요국들은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투표참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제22대 국회에서는 우편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비대면 투표의 기술적·제도적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음

### 3. 면담 내용

- 오스트리아 재외국민수가 2천 여명으로 많지 않아서 현재 대사관에서는 선관위에서 파견 온 직원은 없고, 공사가 담당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80% 정도 나오지만, 실제 재외국민 중

18) 김현아·송진미,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비대면 투표 도입 방안: OECD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도입 쟁점 및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40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6, pp.5-6.

에서 투표하고자 접수하는 선거인수가 많지 않음

- 예를 들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145명의 재외국민 중에서 858명(40%)가 신고접수한 선거인수 이고, 이들 중에서 85%인 732명이 투표함. 재외국민 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오스트리아 역대 재외선거별 투표율]

구분	재외국민수	신고접수 선거인수(A)	투표한 선거인수(B)	투표율 (B/A,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79	256	173	68
제18대 대통령 선거	2,079	579	446	7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100	397	210	53
제19대 대통령 선거	2,100	870	777	8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130	445	237	53
제20대 대통령 선거	2,193	623	514	8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182	342	289	84
제21대 대통령 선거	2,145	858	732	85

\* 자료: 오스트리아 대사관 내부자료

□ 참고로 오스트리아의 투표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투표인 명부(voter register)에 등록되어 있고 기한 내 우편 투표를 신청할 경우 △대선, △총선, △EU 의회선거, △국민투표(Referendum 및 Popular Consultation) 등에 참여 가능

○ 니더외스터라이히, 잘츠부르크, 티롤, 포랄베르크 등 일부 州에서는 州 단위 선거 참여도 가능

□ 다음은 2026년 국민투표 관련 재외국민투표 업무의 주요 일정임.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관련 안내를 재외국민에게 제시함

[2026년 재외국민투표 안내]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 4. 17.(금)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운영기간: 설치일~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헌법개정안 공고일부터 10일 이내
4. 8.(수) ~ 4. 27.(월)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투표인 등록(변경)신청	헌법개정안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5. 3.(일) ~ 5. 9.(토)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	신고·신청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간
5. 10.(월)	재외투표인명부등 확정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5. 14.(목)	재외투표소의 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국민투표일전 20일까지
~ 5. 17.(일)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국민투표일전 17일까지
~ 5. 18.(월)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5. 20.(수) ~ 5. 25.(월)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국민투표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5. 26.(화) ~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 자료: 오스트리아 대사관 내부자료